

OECD EPC 회의 출장보고서

◇ '19.11.7~8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경제정책위원회 (EPC: Economic Policy Committee) 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회의 개요

1]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 EPC(Economic Policy Committee)는 OECD 산하 위원회로, 매년 상·하반기에 회원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를 개최
- 세계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평가하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OECD Economic Outlook' 발간

* 금번 경제전망은 11.21일 발표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11.7(목)~8(금)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 OECD 회원국 대표, OECD사무국, IMF, ECB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 주요의제 : 현 세계경제 상황 및 주요 정책과제 등

*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 대응 2)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
3) 글로벌 부동산 시장 등

3] 한국측 대표단 파견

- 수석대표 :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대표단 : 기재부*, 외교부, 한국은행, KDI**

* 거시정책과 오다은 사무관, 경제분석과 주세훈 사무관

**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 최다희 전문관,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분석부장 김형식, KDI 경제전략연구부 박종호 부연구위원

2. 회의 주요 내용

Round 1~2 (9일 오전 세션)

Global Economic Outlook and Policy Requirements

I.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최근 경제상황 및 전망 】

- 글로벌 GDP는 '19년 2.9%, '20년 2.9%, '21년 3.0% 성장할 전망
 - *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 잠재성장률을 0.3~0.4%p 하회
 -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교역·투자 위축으로 선진국·신흥국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 '21년까지 유사한 성장세 전망
- 미·중 등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교역은 '19년 1.2%로 위축된 이후 '20년(1.6%) ~ '21년(2.3%) 중 완만한 속도로 증가세 확대 전망

※ 세계경제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 ①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② 브렉시트 ③ 중국 성장 둔화 등 지적
- 1] 미·중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 배제 곤란
 - 2]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비교적 완만한 브렉시트 (Smooth Brexit)의 경우에도 영국 중심으로 유로존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
 - 3]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 등이 크게 위축되며 추가 둔화 우려

OECD 세계경제 전망(%)

	'12~'19평균	'18년	'19년 ^e	'20년 ^e	'21년 ^e
실질 GDP 증가율					
전세계	3.3	3.5*	2.9	2.9	3.0
G20	3.6	3.8	3.1	3.2	3.3
OECD	2.1	2.3	1.7	1.6	1.7
미국	2.4	2.9	2.3	2.0	2.0
유로존	1.5	1.9	1.2	1.1	1.2
일본	1.1	0.8	1.0	0.6	0.7
비OECD	4.4	4.6	3.9	4.0	4.0
중국	6.9	6.6	6.2	5.7	5.5
인도	7.1	6.8	5.8	6.2	6.4
실업률	6.6	5.3	5.2	5.1	5.1
인플레이션	1.6	2.3	2.0	2.1	2.1
재정수지(GDP 대비)	△3.6	△2.9	△3.2	△3.3	△3.3
글로벌 교역량	3.4	3.7	1.2	1.6	2.3

* '18년 세계성장률 IMF('19.10) 기준은 3.6%, OECD는 '19.9월 기준 3.6%에서 금번 3.5%로 실적 조정

【 주요국 성장전망 】

- (미국) '18년 2.9% → '19년 2.3% → '20년 2.0% 성장 전망
 - 감세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하며 성장세 둔화 전망
- (중국) '18년 6.6% → '19년 6.2% → '20년 5.7% 성장 전망
 - 경제구조 변화(수출→내수중심)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0년 5%대 성장 예상
- (유로존) '18년 1.9% → '19년 1.2% → '20년 1.1%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제조업 및 교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이탈리아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 성장도 둔화
- (일본) '18년 0.8% → '19년 1.0% → '20년 0.6% 성장 전망
 - 확장재정과 올림픽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중국 수입수요 둔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

【 정책권고 】

- (통화정책)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
 - * 다만, 무역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둔화의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성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
- (재정정책) 재정건정성을 감안하되, 단기 수요진작 및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결정
 - *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상대적으로 부채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가들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책대 검토 필요
 - * '20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해 바람직(desirable)하다고 평가
- (구조개혁) 선진국·신흥국 모두 기술교육 확대,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 가속화 필요

II. 주요 논의 내용

-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효율성 및 적절한 정책조합** 관련 참가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 상당수 참여국들이 국가별 재정여력을 감안한 재정정책의 수행 필요성을 제기(프랑스, 이탈리아)하였으며, 재정정책이 투자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함을 강조(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 한편 상당수 국가들은 재정정책의 장단기 목표 및 성장둔화 요인의 성격을 감안하여 재정정책을 수행해야함을 지적(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벨기에 등)
 - 재정정책 수행시 재정정책의 장단기 목표 및 목표간 상충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단기적으로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고령화 등 장기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인해 재정정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유의(영국)
 - 성장둔화 요인은 구조적일수도 경기적일 수도 있으며, 정책 대응시 성장둔화요인의 성격을 고려하여야하며(캐나다, 이스라엘) 둔화요인이 수요측 요인인지 공급측 요인인지 정책 조합시 고려 필요(벨기에)
 - 정책수행시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 및 재정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뉴질랜드)
 - 자동안정화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Fiscal Space)가 확보되어야함을 강조(TUAC)
- 한편 저인플레이션 요인 및 새로운 무역정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
 - 현재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 생산성 투자 확대를 통해 임금상승을 도모할 필요(TUAC)
 - 국제공조 강화, 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며 투자 및 무역 측면에서 양자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BIAC)

Round 4 (9일 오후 세션, Part 1)

Risks to the Global Economic Outlook and Policy Implication

I.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세계경제 핵심 이슈 및 리스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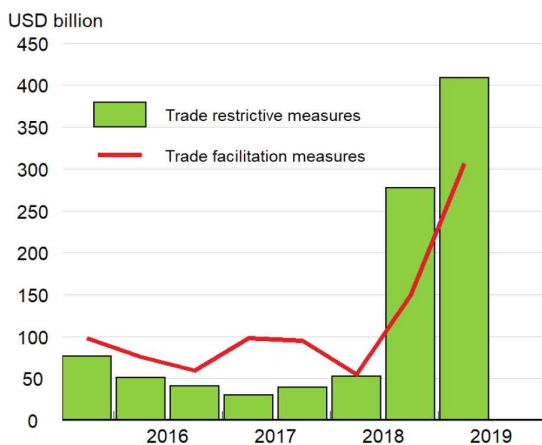
① 무역긴장 및 투자부진 지속·확산 우려

- 무역긴장 등에 따른 투자부진은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 약화, 생산성 악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 특히, 미중 상호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세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비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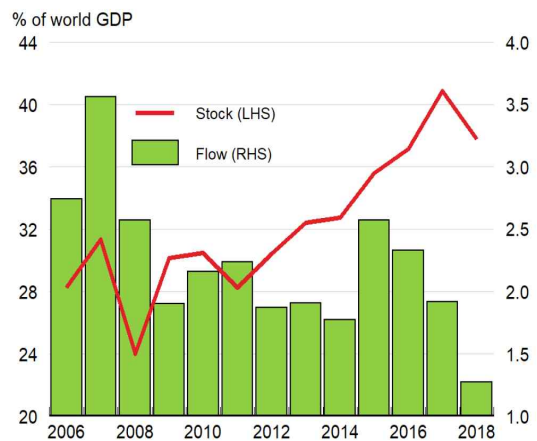
※ [참고] 무역제한 정책의 확산에 따른 FDI 감소 추세

- ▶ 매년 신규로 도입되는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무역 촉진 정책에 비해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의 범위가 최근 급증
→ 글로벌 FDI 흐름(Flow)가 급감하며 잔액(Stock) 감소

G20 국가 무역 촉진 혹은 제한 조치 도입



글로벌 F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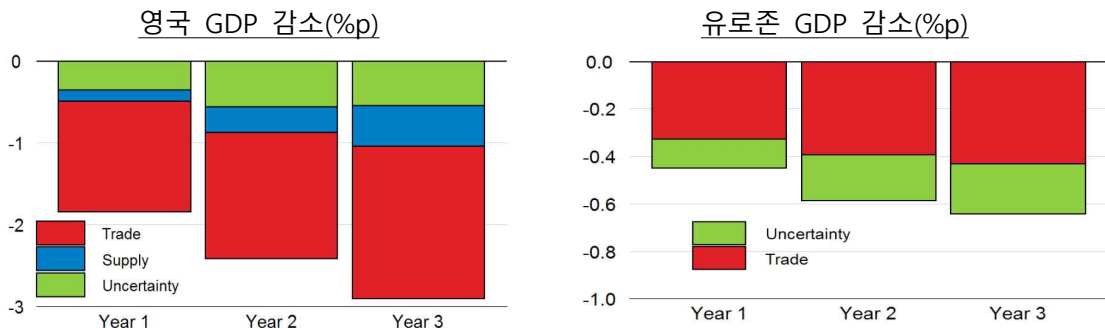


② 해소되지 않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 10.17일 브렉시트 초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의회비준 등에 실패하여 현재 '20.1월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상황
- Smooth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영국-EU간 무역이 타격을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유로존 전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 * 직접적인 관세인상 영향 외에 통관절차 변화 등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

※ [참고]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 추정

- ▶ 직접적인 무역감소 + 영국 공급 체인 위축 +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 작용
- ▶ (영국)노딜 브렉시트 이후 1~2년간 성장률 $\Delta 2 \sim \Delta 2.5\%p$ 감소
1년간 투자는 $\Delta 9\%$ 까지도 감소할 우려
- ▶ (유로존)노딜 브렉시트 이후 1~2년간 성장률 약 $\Delta 0.5\%p$ 감소
영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크게 타격



③ 중국 경기 급락 가능성

- 최근 중국 수입수요 위축, 인프라 투자의 미미한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중국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 상존
 - * 도로·철도 등 인프라(전년동기비, %) : ('17)19.0 ('18)3.8 ('19.1~9월)4.5
 - * 물론, 중국 수입수요 둔화 등은 중국 경제구조 변화(내수중심 성장)에도 기인하지만
- 중국 내수 증가율이 연평균 $\Delta 2\%p$ 감소하면
글로벌 성장률은 연평균 $\Delta 0.7\%p$, 교역증가율은 $\Delta 0.5\%p$ 감소

II. 주요 논의 내용

- 참가국들은 무역긴장,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 기후변화 등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자국의 의견을 개진
 - 상당수 참가국들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 및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데 동의(영국, 아일랜드)하였으며,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시 공급측의 영구적 충격이 예상된다고 언급(아일랜드)
 -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 관련 당사국인 중국은 하방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 부양을 통해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언
 - 특히,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기대 및 RCEP 타결 등 대외 호재 속에서 산업구조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0년 안정된 성장을 전망
 - 반면 일부 참가국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 부진 등을 지적하면서 확장 재정정책 효과 반감을 우려
 - 5~6% 수준의 중국 경제성장률을 '뉴 노멀'로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기능할 것이라 전망(일본)
 - 중국경제와 OECD경제간 연관성 분석 필요성 및 중국경제 둔화에 대한 OECD 회원국간 협력적 대응을 강조(일본)
 - 미중 무역갈등 관련 무역갈등 자체는 불확실성을 통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이탈리아, EU) 글로벌 무역규범이 타격을 받을 경우 동 리스크가 영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EU)
 - 한편 일부 참가자들은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남아공, TUAC)

Round 5 (9일 오후 세션, Part 2)

Report by the Chair of WP1

I. 안전 및 발표 주요 내용

□ WP1 회의(19.10.10~11)에서는 다음의 8개 아젠다에 대해 논의

① 주택수요에 대한 주택공급 탄력성

(How responsive are national and regional housing markets to housing needs?)

- 탄력적 주택공급은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및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 탄력성은 지리적 제약, 토지 규제, 임대시장 규제 등에 따라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
- 회원국들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주택공급이 느리게 반응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신용시장 규제 완화의 역할, 토지 사용 규제, 세금정책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성을 제기

* 주택공급이 느리게 반응하는 요인들로 높은 토지가격 및 건설비용,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규제된 임대시장의 상대적 규모 등을 제시

② 인프라 관리 및 규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Does sound infrastructure governance and regulation affect productivity growth?)

- 낮은 인프라 투자수익은 관리 실패 및 비효율적 규제에 기인하며, 인프라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수준(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모범사례 수준(네덜란드)으로 관리방식 개선시 인프라 관련 부문 기업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2%p 증가

- 회원국들은 인프라 부문별로 관리문제가 상이하고 인프라 투자시 수익 뿐 아니라 공공성과 규모도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공공투자의 기업 생산성 전달경로, 모범 사례 정의 등 분석방법론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

- ③ 임금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업의 역할
(Workforce composition, productivity, and pay: the role of firms in wage inequality)
- OECD 14개국의 기업간·기업내 임금격차 분석 결과 기업간 임금 분포 변화가 전체 임금불평등 변화의 60%를 설명하며, 기업 임금프리미엄 증가 요인이 산업내 진입장벽, 낮은 경쟁, 규제 등일 경우 정책의 역할이 필요
 - 회원국들은 유형, 교육수준, 계약형식, 연령 등의 근로자 특성과 각국의 산업·규제 차이 등을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시계에서의 분석 필요성* 등을 제안
- ④ 소비 측면에서 무역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trade from a consumption perspective: scoping note)
- 프랑스, 스페인을 대상으로 소비 경로*를 통해 무역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분배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소득에 따라 다르게 소비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에 무역이 미치는 영향
 - 많은 회원국들이 프로젝트 개시와 지속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하였으나 일부는 연구 지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가계지출 중 교역재 비중이 제한적이며 지출패턴이 소득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그룹의 영향을 받는 점을 지적 하고, 최신 데이터 입수 시점 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연기 필요성(2021년까지)을 제기
- ⑤ 장기모형 재정부문의 최근 개선사항
(Recent improvement to the Fiscal Block of the Long-term Model)
- 내년 공표 예정인 OECD 장기 시나리오를 위해 공공연금, 공공의료지출 및 장단기금리 전망 개선 방법을 논의*
 - * 공공연금지출은 2060년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GDP의 0~3%(중간값 1.5%)까지, 공공 의료지출은 2060년까지 GDP의 0.7~3.8%p(중간값 2.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 전망식에서 인구구조, 안전자산 희소성 등의 요인을 반영
 - 회원국들은 장기전망 개선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수급개시연령 상향 효과가 다소 저평가되었으며, 평균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⑥ 구조개혁의 정형화된 사실

(When do countries reform? Stylized facts from Going for Growth)

- 위기 이후 구조개혁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구조개혁은 경기부진 시기에 소규모 개방 경제, 통합도가 높은 정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
- 회원국들은 구조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매우 환영하였으며 경제주체 및 당국간 협력, 개혁준비 위원회 독립성, 정책당국 역량, 패자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으나 적절한 개혁 시기에 대해서는 국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

⑦ 구조개혁의 계량화

(Quantification of reforms: scoping paper for sector-level estimates)

- 부문별 데이터 이용을 통해 구조개혁의 거시경제 영향, 국가·부문별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의 정도(*granularity*)를 제고할 수 있음
- 회원국들은 동 연구를 통해 구조개혁의 부문별 영향 및 인과관계 분석의 질이 제고된 점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기업단위 데이터와 거시부문 데이터의 적정성 비교 등에 대해 논의

⑧ 직업 진입 규제가 서비스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Occupational entry regulations and their effects on productivity in services: measurement and firm-level evidence)

- 규제 엄격도 등을 반영한 직업진입규제지수(OER)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진입규제 완화는 업무방식 선진화, 노동재배분 등을 통해 개인 및 전문서비스의 총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확대
 - 회원국들은 동 연구를 새로운 데이터 구축 및 정책적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 높게 평가하면서 직업진입규제의 장단점, 규제 증가 요인, 분석 방법론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 한편 사무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국제조세기준 개편 관련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진행상황 공유를 환영하면서 세계개편 방식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해 논의

Round 6 (10일 오전 세션, Part 1)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II. 주요 논의 내용

- OECD사무국은 각국의 제안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제도 개편안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발표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과세 복잡성, 이중과세, 과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동 문제 해결을 위해 OECD/G20은 2020년까지 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OECD는 각국의 제안을 종합하여 10.9일 디지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도출(Pillar 1에 기반)

※ [참고] 디지털세 주요 접근법 (10.3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 (Pillar 1)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 ① 사용자 참여 접근법: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 ②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 ③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 ▶ (Pillar 2) 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방지규정을 도입

- OECD 개편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Pillar1 개편안은 투자허브, 저법인세국가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Pillar2는 글로벌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투자에 대해서는 Pillar1, 2 모두 투자의 **effective rate** 분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참고] 디지털세 관련 향후 일정

- ▶ (Pillar 1 공청회) 11.21~22일, OECD 센터(파리)
- ▶ (Pillar 2 공청회) 12.13일, OECD 센터(파리)
- ▶ (IF* 총회) '20.1.29~30일

* (Inclusive Framework) OECD/G20 BEPS 프로젝트(15개 과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약 130여 개국 참여)

Round 7 (10일 오전 세션)

OECD Horizontal Housing Project

<Part 1: OECD Horizontal Housing Project : An Overview and Work Ahead>

I.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Horizontal Housing Project를 통해서 각국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보고서 생산을 핵심 목표로 함
 - 부동산 시장은 거시 건전성 및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지님
 - 주택 시장 과열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계의 주택 구매력(housing affordability)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 시장 자산 가격은 소득 및 부의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한편, 주택 시장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복잡성을 지님
 - 효과적인 주택 시장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토지 규제, 금융 규제, 조세 제도, 교통 정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필요
 -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
 - Horizontal Housing Project를 통해서 정책적 복잡성을 고려한 국가, 지역, 가구 단위의 종합적인 주거 정책 연구를 수행

- OECD에서 발간한 기존의 주거 관련 연구를 통합하고, 주택 공급, 주택 구매력, 빈곤 퇴치, 노동시장 효율성, 거시 경제 안정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개발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국가, 지역, 가구 단위 및 다양한 정책적 각도에 서 종합적인 주거 정책 연구를 수행
- 대표적인 세부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비탄력적 주거 공급과 거시 안정성 사이의 관계
 - 주거 이동성 확보를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 주택 시장과 소득/부의 불평등 간의 관계
 - 토지 활용 규제와 주택 가격 사이의 상관 관계
 - 설문 조사에 기반한 주택 시장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II. 주요 논의 내용

- OECD 사무국은 각국 정부의 효과적 부동산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과 경기변동, 주택과 분배, 주택과 환경 등을 분석하는 Horizontal Housing Project를 소개
 - 주택 가격과 경기변동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택은 중산층의 주된 자산으로 부의 분배와도 관련이 있음
- 각국은 동 프로젝트를 환영하는 가운데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
 - 상당수 참가국들이 보고서의 데이터 이슈 및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 주택구매력과 노동시장 간 관계에 대한 심층분석(이탈리아, 뉴질랜드), 주택정책의 거시 및 미시적 영향 분석 필요성(인도네시아), 주택시장과 제도 간 관계(EU), 인구변화의 주택시장 영향 등의 추가 분석을 요청

<Part 2: Housing Market Policy : Demand and Supply Responses>

I.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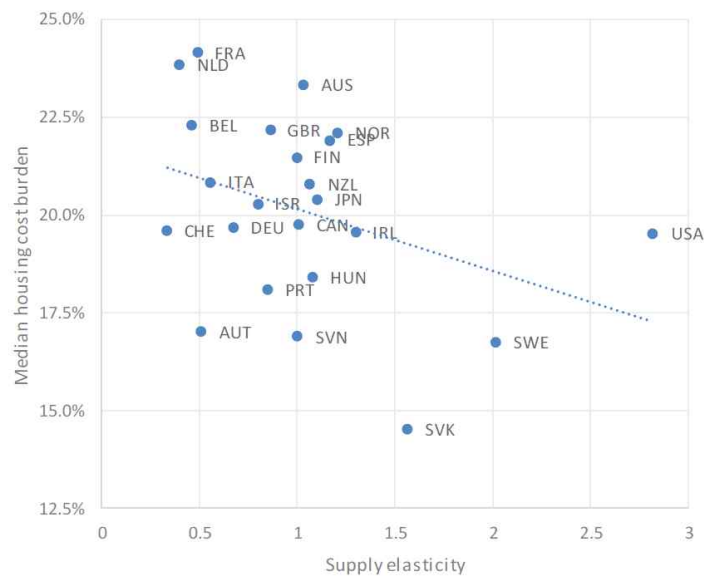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에 대해 검토함
 - 1980-2017년 25개국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공급의 장기 가격 탄력성을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추정
 - 각국의 정책적·자연적 제약 조건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 (연구의 중요성) 탄력적인 주거용 부동산 공급은 (1) 부동산 가격 변동성의 안정성 유지 및 (2) 적시에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
 -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밀한 추정 및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연구 결과) 주거용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국가별로 추정치가 상이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규제 요인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용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단위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함
 -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주거용 부동산 공급이 부동산 가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개발 가능한 나대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가 강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한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지표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1% 증가시 부동산 공급의 변화량이 평균적으로 약 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부동산 규제 관련 지표: 부동산 규제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 정도가 높을수록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OECD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수를 개발.
 - 부동산 임대 규제 관련 지표가 1단위 상승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1% 증가시 부동산 공급의 변화량이 평균적으로 약 5.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 국가 비교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데이터 베이스의 부재 (2) 각국의 지리적 특성의 상이함 (3) 부동산 시장이 본질적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에 대한 측정 오차를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함
-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 주거비 부담 정도 (2)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3) 부동산 가격에 대한 소득 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Figure 8 참조)

Figure 8. There is some link between supply elasticities and median housing costs

Median of the 2014 housing cost burden from mortgages or rents vs. estimated supply elasticity



- 한편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부동산 수량 변수의 변동폭은 낮은 것을 나타남
-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소득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임대료 규제가 강할수록 소득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

- 하지만 재산세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재산세의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득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 하위 행정구역 자료를 활용한 추정 또한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1)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 제한되고 (2) 부동산 관련 정책적 규제가 강할수록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II. 주요 논의 내용

- 주요 연구 결과 발표
 -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 자연적 제약 조건이 강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음
 - 부동산 관련 규제의 강도가 강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음
 -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단위 탄력적이었으나, 각국마다 상이한 값을 지님
- 각국 대표는 대체적으로 연구의 정책적 유용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해 건의
 - 각국 대표는 수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며, 향후에 수요 요인이 반영되기를 요청(프랑스, 스페인)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도와 공급탄력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한국)

- 연구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표본에서 누락된 국가에 대한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함(스페인)
- 각국의 공급 탄력성 세부 추정치에 대한 자세한 요약 요구(이탈리아)
-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제언을 제공해야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미국)
- 금융 요인 및 시장 안정성
 - 공급탄력성이 높은 경우 수량 변수의 변동성은 크지만,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존재함(한국, 독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미국)
- 부동산 시장과 노동시장
 - 부동산 소유 여부와 노동 공급사이의 상관관계(프랑스)
 - 주거용 부동산 공급 여건과 노동 이동성(labor mobility)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뉴질랜드)
 - 청년층의 주거용 부동산 수요-공급과 관련된 연구 및 청년 계층 노동 공급관련 함의(오스트리아)
- 매매 시장 및 임대 시장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독일, 러시아)
 - 문화적으로 매매에 대한 선호가 강한 가운데 임대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 반면,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

첨부1

출장 일정

일 시(현지 시각)	주요 일정	비 고	
11.5 (화)	12:30	· 인천공항 집결	· KE0901편(비행시간:12시간30분) · 호텔: Novotel(잠정) · 안전 및 발언내용 토의
	14:00~18:30	· 인천 출발 → 파리 도착	
	18:30~20:00	· 파리 도착 → 호텔 이동	
	20:00~22:00	· 사전회의(필요시)	
11.6 (수)		· 사전회의(필요시) · 안전 및 발언내용 토의	
11.7 (목)	09:00~09:30	· 호텔 → 회의장 이동	· Randall Jones의 후임자로 사전면담 추진 예정(잠정) · 안전 미정 · 장소: 회의장 내 양식당 · 참석: 수석대표 * 나머지 대표단 별도 식사 · 안전 미정
	09:30~10:00	· 한국경제담당 Christophe Andre 면담	
	10:00~13:00	· EPC 회의	
	13:00~15:00	· 사무국 공식 오찬(잠정)	
	15:00~18:00	· EPC 회의	
11.8 (금)	09:00~09:30	· 호텔 → 회의장 이동	· 안전 미정 · KE0901편(비행시간:11시간)
	09:30~13:00	· EPC 회의	
	13:00~15:00	· 대표단 오찬	
	21:00	· 파리 출발	
11.9 (토)	15:55	· 인천공항 도착	